

국민 10명 중 8명 주권 행사… 21세기 이후 최고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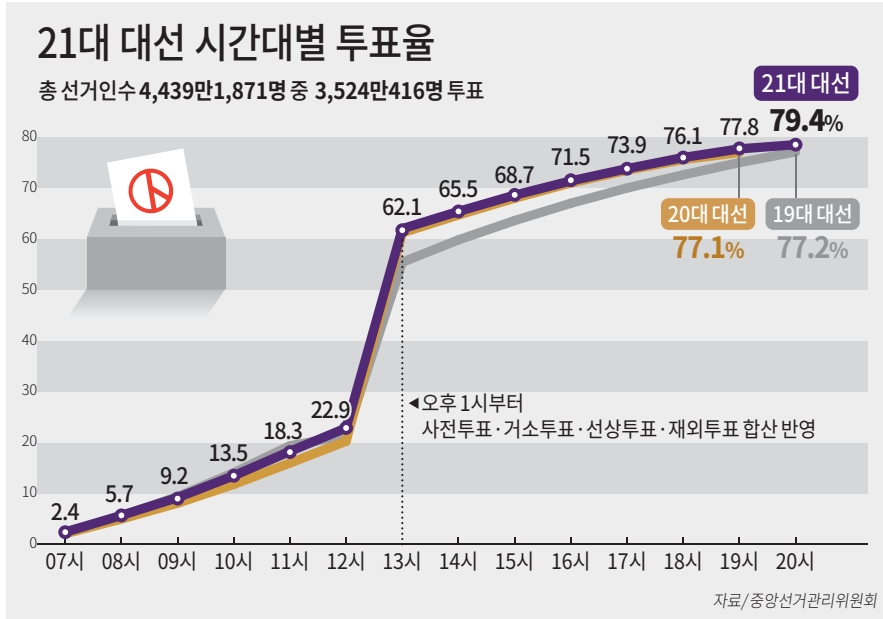
〈79.4%〉

4439.2만명 중 3524만명 투표
4050~6070세대, 지지층 엇갈려
“유권자들, ‘내란종식’ 힘 실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이 20대 대선보다 2.3%포인트 높은 79.4% (잠정치)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 보수 결집을 노렸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내란 종식’을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다. 21세기 이후 치러진 대선 중 가장 투표율이 높았다.

이번 투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후 TK(대구·경북)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보수 강세 지역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자강론’을 띄웠지만,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만큼의 보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



지 못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을 볼 때, 많은 유권자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경제 실패 등 실정에 분노했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세종, 충북,

강원, 제주 등에서 앞섰다. 김 후보는 부산, 경남, 경북, 대구 등에서 앞섰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이재명 49.3% vs 김문수 40.1% ▲경기 이재명 55.8% vs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vs 김문수 37.4%이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은 ▲부산 이재명 42.7% vs 김문수 49.0% ▲경남 이재명 43.4% vs 김문수 48.8% ▲울산 이재명 46.5% vs 김문수 44.3%

▲대구 이재명 24.1% vs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vs 김문수 64.0%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은 ▲광주 이재명 81.7% vs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vs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vs 김문수 11.8% 등으로 집계됐다.

역대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은 ▲대전 이재명 51.8% vs 김문수 38.3% ▲충남·세종 이재명 51.3% vs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vs 김문수 40.2%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대 (72.7%)와 50대(69.8%)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 (64.0%)에서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재명 48.3% vs 김문수 39.4% ▲여성 이재명 55.1% vs 김문수 39.2%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여성의 58.1%, 30대 여성의 57.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36.9%, 30대 남성의 34.5%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론’이 강력하게 유권자들을 설득했다고 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출구조사 발표 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해 힘을 실었고,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도록 심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계엄 반대 여론이 80% 정도 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론이 60%, 정권 교체 여론이 53% 정도 됐는데, 출구조사에서 51.7%가 나온 것은 압승이긴 한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견제를 조금 받은 것 같다”고도 했다.

채 교수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책임 있는, 유의미한 집권세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핵심 키워드 ‘내란·파기환송·단일화·젓가락’

짧은 선거기간에도 수많은 이슈 발생
정책보다 선두주자 향한 비방전 난무

12·3내란 이후 이어진 6개월간의 혼란이 6·3 대통령 선거로 다소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4월4일 이후 두 달만에 급작스레 치러졌기에 선거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그 2개월마저도 길게 느껴졌다는 반응들이다. 이에 3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이번 대선의 4가지 키워드를 짧게 정리했다.

◆ **선거 내내 야권서 등장한 단어, ‘내란 극복’**

21대 대통령 선거는 애초에 ‘내란’ 때문에 이뤄졌다. 12·3내란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서 파면됐고, 그로 인해 6·3 조기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불어민주당, 그와 함께하는 야4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 이재명을 뽑아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투표 전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전날(2일) 모든 유세 현장에서 “이번 대선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나 아무개냐의 대결이 아니다. 우리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정면 대결”이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 **노동절에 오후 정국을 뒤흔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지난달 1일 근로자의날(노동절)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많은 이들의 시선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 3월 말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에, 대부분은 상고기각(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죄 확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켰다. 정치권은 이 후보의 거취를 놓고 들끓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다른 재판들도 모두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 **컨벤션 효과 무색… 실패로 돌아간 ‘보수 단일화’**

이번 대선 역시 ‘단일화’라는 화두는 보수진영의 것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는 경선 내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서두르는 데 불만을 표하며 정식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했

고, 지도부는 김 후보가 입장을 바꿨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당 지도부는 지난달 10일 새벽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 전 총리로의 후보변경을 위한 당원투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당원투표가 부결되며 김 후보가 적극적으로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이후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이 후보의 거부로 무산됐다.

◆ **선거 후반 잠식한 이준석의 ‘젓가락’ 파동**

이번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TV토론이 세 차례 열렸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 정책을 비교해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열린 것이지만, 공약 검증보다는 선두 주자를 향한 비방전만 난무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 열린 마지막 토론은 생중계를 보던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준석 후보가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폭력성 발언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생중계를 보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준석 후보 발언의 맥락을 알지 못했다. 표현 수위에 놀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관련 질문을 받았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여성단체 등은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5당’은 이 후보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준석 후보는 “순화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서예진 기자 syj@

인수위 없는 정부… 국무총리 등 인사 속도

곧바로 임기… 취임식 간소화 전망

4일 또 한번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다. 통상적인 대선이었다면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선언 시점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설치 없이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 후 바로 취임하는 만큼, 취임식은 대폭 간소화돼 진행됐다.

통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 야외에서 진행하고 국내외 내빈 초청 등으로 인해 4만~7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때에는 약식으로 진행됐으므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그리고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당시 취임식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로만 구성됐다. 또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진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도 초청 인원은 300~4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시간은 오는 4일 오전 11~12시 사이로 보이며,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신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인선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퇴해서다. 유 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이유는 부처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한 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